

# 티베트 사태와 베이징 올림픽

글 · 이희옥 | [leeok@skku.edu](mailto:leeok@skku.edu)

## 난제에 휩싸인 중국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정치적 시련을 겪고 있다. 산둥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열차 사고, 티베트 사태, 전염병 확산, 쓰촨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 등으로 화려한 축제 속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고자 했던 중국의 꿈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중국은 올림픽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중국 지도부는 은폐와 통제로 얼룩졌던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제사회에 정보를 개방하고 신속하게 '현장정치'를 몸소 실천하면서 새로운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고민은 대지진이나 전염병과 같은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가 가져다주는 충격 못지않게 이른바 '중국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국제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티베트 사태는 바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대지진의 참사로 인해 티베트 사태의 국제화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재연될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티베트 사태의 원인을 점검하는 것은 향후 중국과 티베트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2008년 올림픽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중국에게 2008년은 관건적인 해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제 2기 후진타오 체제가 힘차게 출범했고, 오늘의 중국을 만들었던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분수령은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8분이라는 매우 중국적인 택일을 통해 개막하는 베이징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외세에 의해 강제로 열린 근대의 치욕을 씻고 '중국의 세기'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장엄한 선언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에서 대중들에 이르기까지 올림픽을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서 민족적 자부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가려진 인권의 한계, 민주화의 지체, 종교 자유의 제한 등 보편적 가치를 문제 삼고 있으며 새삼 '인권 없이 올림픽 없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티베트 시위는 바로 이러한 국제 여론에 불을 지피는 도화선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통과하던 올림픽 성화는 곳곳에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티베트와 중국, 사회주의와 인권이라는 대립항을 만들면서 하나의 정치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티베트 입장에서 보면 티베트 문제를 국제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티베트 시위에 대한 중국의 강경진압은 평화국가를 표방한 자신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국제적인 반중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

## 독립과 동화(同化)

이러한 티베트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독립과 동화 사이의 풀리지 않은 긴장을 풀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하다.

티베트인들은 험준한 고산지역에서 고유한 역사, 문화, 언어, 종교를 가진 독자적인 공동체를 유지해왔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자연에 순응하였고 인간의 행복을 내세워 의탁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두려운 자연 앞에서 자신을 지켜줄 영적인 지도자를 간절하게 찾았고 이는 관세음보살의 대를 이은 환생한 살아있는 부처, 즉 달라이 라마를 통해 나타났다. 흔히 티베트 불교를 라마불교라고 부르는 이유도 '라마는 곧 환생한 부처'라는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티베트 사회는 법왕제(法王制)를 탄생시켰다. 따라서 비록 티베트의 과거 영토가 중국에 복속되었으나, 자신의 정체성을 티베트의 역사 공동체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자기를 버리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뜨는 '오체투지' 만큼이나 이들의 저항은 종교적 신념으로 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티베트의 자치를 허용하

중국은 성화 봉송 파문 이후 국제여론을 고려하여 티베트와의 막후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전제조건에 대한 이견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전망은 중국과 티베트 모두에게 전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 보다는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지루한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한족에 동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티베트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세속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자원개발, 티베트 산업화, 군사 기지화 정책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족을 티베트 지역에 이주시켜 티베트인과 함께 어울려 살게 하는 잡거(雜居)정책을 통해 티베트 사회를 화학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미 티베트 지역에 살고 있는 약 4%의 한족이 티베트 상권을 장악했으며, 새롭게 형성된 기관이나 기업에 파견된 간부와 기술자 군인들이 이 지역의 실질적인 식민정책의 '대리인'으로서 주류사회를 넓게 형성하게 되었다. 여기에 지난 2006년 베이징과 티베트의 철도 개통으로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티베트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빨라지면서 티베트의 개방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티베트의 미래를 둘러싼 중국과 티베트 사이의 인식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졌다. 이에 티베트는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힘의 비대칭성을 절감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달라이라마 14세를 활용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서구세계의 '중국 때리기'나 인권, 민주화, 타이완, 종교자유를 통해 중국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서방의 평화적 전복정책(peaceful evolution)도 착종되면서 티베트 문제의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망명정부 산하조직인 티베트 청년회가 인도에서 '걸어서 라싸까지' 가겠다는 정치적 슬로건이나 '올림픽은 티베트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간주한 달라이 라마의

호소도 올림픽 이후 티베트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멀어질 것이라는 절박성을 반영하고 있다.

### 티베트와 일국양제(一國兩制)

중국은 티베트 문제를 영토와 주권에 관련된 내정 문제로 접근하면서 지역자치정책을 추구해 왔으나 티베트 망명정부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사실상 독립에 준하는 고도자치를 주장해 왔다. 형식적으로는 자치의 수준과 내용을 둘러싼 갈등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자의 주장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견고한 벽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1991년 티베트 망명정부(The Government of Tibet in Exile) 헌법에 나타난 목표는 '신성한 라마의 지도하에서……. 티베트 삼구(三區)를 민주, 연합, 자주자치의 공화국과 평화중심을 건설하기 위해 특히 티베트 자유투쟁의 단계를 높이고 국내외의 티베트인의 단결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기초를 공고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쓰촨성, 칭하이성, 간수성 등지로 분할되어 있는 티베트의 옛 영토를 대티베트구(大藏區)로 묶어 독자적인 행정권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군의 철군과 비(非)티베트인들을 대티베트 지역 밖으로 이주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연방민주자치공화국의 개념으로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타이완 관계에 적용하고 있는 "일국양제(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체제의 인정)"를 티베트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러한 티베트의 요구를 일축했다. 우선 중국은 영토와 주권 문제를 다른 어떠한 국가이익 보다 우선하는 핵심이익(vital interest)으로 간주해 오고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자본주의를 유지해 온 특별행정구와 타이완과 내정문제로 간주해 온 티베트는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이미 다른 행정구역에 편입된 옛 티베트 지역을 다시 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티베트에만 고도 자치권을 제공할 경우 티베트의 비대화는 물론이고 인접한 쓰촨성 등이 노출되면서 국경을 접한 다른 소수민족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범양제에 기초한 신정일치를 추구하는 티베트 사회와 사회주의 정체성 사이의 간극이 너무 넓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남아있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들이 ‘봉건적 귀족과 라마승이 착취하는 농노제도를 해방시켰다’는 마오쩌둥 시기의 티베트 해방 논리를 새삼 불러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평화로 가는 험난한 길

중국은 성화 봉송 파문 이후 국제여론을 고려하여 티베트와의 막후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전제조건에 대한 이견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전망은 중국과 티베트 모두에게 전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 보다는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지루한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중국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 라마 14세의 자연사를 기다리면서 시간은 자기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올림픽이라는 공간 때문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중국이 새로운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강경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정부가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나 민족주의를 동원하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의 대지진 은 그나마 불씨를 살려가던 티베트 문제의 국제화를 일거에 덮어버렸다.

따라서 티베트 독립이나 대티베트구에서의 완전한 자치를 향한 티베트인의 꿈은 중국당정이 사회적 통제력을 현저하게 잃거나 ‘다민족 통일국가’라는 중국의 역사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국민혁명 시기의 권력진공에서 누렸던 짧은 시간의 ‘고도자치’나 민족연방자치제도는 더 이상 실현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티베트 내부에서 독립과 자치를 둘러싼 노선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티베트의 세속화와 맞물리면서 정체성의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갈자루를 쥐고 있는 중국이 이른바 ‘근본문제’에 대한 양보 없이 부분적인 개량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실제로 중국이 오랫동안 민족자치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티베트인들은 갈수록 이등국민의 소외감을 느껴왔고 티베트의 기득권층과 대중일반 모두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등 ‘분할통치’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등장하면서 중국 위협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중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여론을 의식하여 티베트 문제에 대한 양보와 당근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바로 티베트 민족문화와 민족어 사용 확대, 티베트인들의 정치참여 공간 확대, 개발이익의 티베트 환원, 소수민족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려 등이 그것이다.

현실적으로 티베트의 평화는 중국이 편입과 일체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다원성과 공존을 찾아가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치’라는 원칙과 ‘동화의 기획’ 보다는 자연스러운 ‘동화를 위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잠정적인 티베트 평화의 최소 요건이 될 것이다. 

글 **이희욱** |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한국정치학회 이사, 중국정치연구회 운영위원장